

제216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시 정 질 문

김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수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의회 회기는 끝나게 되지만, 2015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안산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통하지 않고 소액이나 특정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얼마만큼의 재량을 가지고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해야 하는 것은 수의계약 운영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 1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5-02-03 13:54

하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되는 수의계약 사례는 대부분이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 들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또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안산시 공직자는 물론 저를 포함한 시의원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산시 수의계약 형태를 알기위해 얼마 전 안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운영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선·후배 의원님, 집행부 국장님,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76만 안산시민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2011년도부터 2014년도 10월 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7,270건의 계약이 1,835개 업체를 통해 이루어 졌고, 집행된 금액은 2천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2014년도 예산이 3천 8백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1년 예산의 42%인 2천 14억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된 것입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 4백 40억, 2012년도에는 7백 20억, 2013년도에는 5백 30억, 2014년도 3백억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 2 -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5-02-03 13:54

그런데, 이를 연체들이 실시한 운사나 물품 운송 내용 보면,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운사 등이 많고 있었습니

다. 폐기를, 도둑, 전기 분야 운사에 많이 집중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30회 이상 반복하여 수익계약이 이루어진 연체만 35개 연체에 2백 1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수익 계약 금액 대비 11%에 달하는 부분으로, 수익계약 공영이 특정 연체에만 집중되어 운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운사 등에도 의외로 많은 관외 연체가 선정되어 운영된 점은 선정하는 것은 어렵 수 없는 일이지만, 단순 물품 구입이나 물품, 전문기술이나 특정 물품 등의 구입을 위해 관외 연체를

관련 연체와 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한편, 수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생각한다면, 관내 연체 선정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 보면, 안산시가 아닌 관외 지역 계약건수만 1,485건에 784개 연체, 금액으로는 전체 수익계약 금액의 40%인 4백억원 정도가

이들 계약 대부분이 1인 견적만 받아 처리할 수 있는 2천만원 이하 계약 건이 대부분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 운영은 많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공사 지역에 대해 유사한 공사를 계속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분리 발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우리 시 수의계약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 대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더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수의계약 형태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입찰 등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에 있어서도 조사기간 내 112건의 계약을 통해 50개 업체에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생활폐기물 위탁 용역 등 대형 계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설계·학술용역, 임차, 홍보, 행사용역 등에도 분야별 평균 2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고액의 수의계약 집중이 신속한 행정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니다. 이번 시에서 제출된 자료 중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명의의 대표로 있는 5개의 업체가 각 각 계속해서 계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물에 각 각의 사업자를 내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사업자를 내고 유사한 공사를 계속 수주 받은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편의를 봐 주었다고 오인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한 사례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앞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객관성이 담보 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이 우리 시 수의계약이 전부 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이루어졌던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외 업체 선정, 유사한 공사 계약의 수의계약 분할 발주에 대한 우려, 과도한 고액 수의계약 형태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생각과 추진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사항은 무분별한 용역 사업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참으로 많은 용역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 상에 용역이라는 통계목과 부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실제 용역 계약으로 집행된 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과 제2회 추경까지 예산서 상 표시된 모든 용역 예산은 89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7백 60억원이 용역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는 거의 6백 7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2014년도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연구용역비 통계목에서 집행된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시설비 등에서 집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부기나 내용 표기 없이 시설비나 사무관리비에 묻어
가기 식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생각되며, 최소한
시설비나 사무관리비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무슨 용역사업이라는 별도의 부기는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용역 사업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무분별하게 남발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실제 집행되는 용역사업의 금액이 몇 백 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안산시 행정 집행에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분별한 용역 사업을 막기 위해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4년도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기술용역과제는 3천
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
· 학술 용역은 1천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용역계약 내용에서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었던
용역이 실제 더 많았음에도, 사전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었
다든가 등의 이유로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도 용역 계약 중에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산시 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안산시 제3차 택시총량계획수립 연구 용역, 안산시 어촌정주어항 지정 고시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계획 수립과 관련된 많은 용역 들이 있었습니다.

각 각의 용역들은 개별 법령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각의 조항에서 용역으로 추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법령에 용역의 수행 방법이 따로 정해진 용역만 용역과제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으로만 본다면, 해당 용역 사업 전체가 용역과제 심의를 걸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되어 집행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기술용역인 정보통신 분야 민간투자사업 전문사업 관리 용역,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구현 용역, 배출권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용역 등 상당 부분 조례에서 정한 부분보다 그 범위 너무 넓게 해석하여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은 용역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성격인 각종 경제성 검토 용역, 개선 대책 용역, 컨설팅 용역 등도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용역들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일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용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 통제와 이후 모니터링이 없어 용역 사업 자체가 진행되어 왔다면, 이것은 우리 조직에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업비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의 경우 용역과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조례가 중복 운영되어 혼란이 되는 부분과 조례의 심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 하거나 용역 수행 가이드 라인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산시는 많은 유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하여 용역 없이는 사업도 못하는 용역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용역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제 심의, 조례 개정과 가이드 라인 마련, 이후 사후관리 방안, 용역사업의 예산서 상 투명한 명시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것 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12.19.(금)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16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서면답변]

< 서면 질문 : 1의원 2건 >

【서 면 답 변】

○ 김동수 의원 : 2건



안 산 시

-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운영사항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 및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외업체 선정, 유사한 공사 계약의 수의계약 분할 발주에 대한 우려, 과도한 고액 수의계약 형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을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시에서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체결하는 모든 사항을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진행사항을 볼 수가 있어 과거에 비해 투명성은 상당부분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은 계약부서가 본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총 46개 부서에서 계약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일부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4년 동안 2천 14억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지만 그중 46%인 935억원이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용역비용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 앞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오해를 없애고 신규 우수업체 발굴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약 업체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외업체와의 계약에 대하여는 학술연구 용역과 설계, 기술용역 등 관내에 관련업체가 없거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 최근 사업발주 첫단계인 설계용역 추진 시 설계 내역서에 관급자재 등 제품 선정 시 관내업체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동일한 공사지역에 대한 유사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물량, 사업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사항이나 향후 동일한 공사 지역 또는 통합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1억원이상 고액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특정인의 기술·용역·신기술이나 특허공법, 학술용역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대행사업,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되어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수의계약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수의계약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서 간 계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반기별 수의계약업체에 대한 분석 및 구청, 사업소와 공유를 통하여 일부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 동일지역 내 유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분할 발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 사업물량,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관내업체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급공사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약행정에 신뢰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분별한 용역사업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기술용역 등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여 용역이 남발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예산서 상 용역이라는 통계목과 부기로 명시되어 있는 예산액과 실제 용역 계약으로 집행된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금액상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산서상 용역에 대한 부기를 명확히 해야 함.
- 우리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20여건을 심의하여 왔고, 심의 대상으로는 기술용역과제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및 집행 용역은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1천만원 이상의 연구·

학술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용역의 수행방법이 규정된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술용역과 조례나 법령의 규정이 없는 용역들에 대하여는 용역과제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총 25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20건, 수정의결 4건, 부결 1건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 다만, 공사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축사로 구성된 용역기관에서 설계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설계 용역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전문기술용역도 관계 법령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용역 수행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단순 시설물 관리 용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에 따라 민간 용역 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고, 선정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산시 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안산시 제3차 택시 총량 계획수립 연구용역, 안산시 어촌정주어항 지정 고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들은 5년,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서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있고,
-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용역이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하여 용역과제심의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러한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4회 이상 용역과제 심의회 대상사업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 기술 용역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모호한 법령 규정을 이유로 용역 심의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술 용역 등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사전 심의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 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현행 조례상 공사설계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한 범위가 법령과 중복되거나 혼선이 있으므로 경기도, 수원시 등과 같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용역 성과물에 대한 사후 책임성 강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1억 이상의 용역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성과 관리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결과물을 공유하고 감시함으로써 낭비적 용역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서상 용역 예산과 용역 계약으로 집행된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행사, 임대임차 등 용역사업의
종류 및 대상 확인을 통하여 향후에는 예산서상
용역사업임을 명기하여 용역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